## 월/요/광/장

# 총장 직선 추천제 폐지가 마땅하다

김영용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집권 시 실천할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이런 후보자들에게 사람들은 흔히 국가경영의 철학을 묻는다. 그러나 질문이 잘못됐다. 가치관, 습관, 인생관, 선호 등이 서로 다른 수많은 이질적(異質的)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거대 사회는 구체적 목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목적은 추상적이지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국가는 경영의 대상이 아니다. 국리민복(國利民福)이나 국태민안(國泰民安)이라는 말은 이런 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 다중의 의사를 묻는 선거 방식에 의해 국사를 담당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물론 가장 적합한 사람이 선출되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선출은 다중이 그렇게 원한다는 것일 뿐, 선출 방식 자체가 체계적으로 최적의 인물을 뽑는다는 보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국병을 치유한 대처가 수상이 되고 미국을 중흥시킨 레이건이 대통령이 된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이 낳은 체계적 결과가 아니라, 단지 행운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제도가 선호되는 이유는 아직 인류가 더 나은 다른 대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구체적 목적을 가진 학교, 기업, 병원 등의 조직은 경영의 대상이다. 학교는 교육과 연구가 목적이며 기업은 돈 버는 것이 목적이다. 또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조직은 당연히 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구성원들이 동질적(同質的)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조직의 목적을 공유하지 않거나 공유할 능력이 없으면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국가에는 구성원을 퇴출시키는 장치가 없지만 조직에는 퇴출 장치가 있는 이유다. 그런 만큼 조직의 운영은 명령과 통제에 따른다. 그런 조직의 장(長)을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에 의해 선출하는 것은 조직의 구성 원리에 맞지 않는다.

한 동안 대학가를 술렁이게 한 교직원들에 의한 총장 직선 추천제가 완전히 폐지될 전망이다. 총장 직선 추천제는 1980년 대 후반 학원 민주화의 기치 아래 도입되었고, 이는 군사정권에 의해 학원이 탄압받던 당시에는 정당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선거 비용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 여론의 지원 등 아군(我軍)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에 의한 학원 탄압이라는 말은 가당치 않다. 추천을 위한 직선 방식으로 적합한 인물을 선택한다는 보장이 없는 마당에 선거 비용만 많이 들어간다는 점도 큰 문제다.

효율성은 산출물의 가치를 투입물의 가치로 나눈 것이다. 선거에 의한 산출물 가치가 체계적으로 높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투입물 가치를 낮추는 것은 총장 선임과 관련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려는 배경에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이 있다. 물론 교육과 학문의 자유를 위해서 학원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재정 자립 없는 자율은 소망 사항일 뿐이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의 국립대학이 처한 상황이다.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인화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경쟁력을 높이고 평판을 높여 자생할 수 있는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직원들은 법인화에 반대한다. 퇴출의 위험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자율과 생존 간의 갈등에 따른 모순이다. 현 상태대로의 생존을 원한다면 자율은 일정 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국가로부터 자원을 지원받으면서 소망하는 자율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수많은 익명의 이질적 사람들이 살아가는 국가 사회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데 선거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현재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구성원들을 동질화해야만 구체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학교 같은 조직에서 선거는 애초에 맞지 않는 방식이다. 교직원 직선에 의한 총장 추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진전이다.

〈전남대 교수·경제학〉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설

# 정부 지원 없이 F1 성공 이끈 지역의 저력

14일 영암에서 막을 내린 F1대회는 16만 명에 이르는 관중과 원활한 교통 및 숙박대책 등 운영 면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F1이 사실상 정착된 것이다.

이번 대회는 프로모터와 경기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한국인이 맡아 '우리의 손으로 치른 첫 대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또 체커플래거에 선정된 세계적 가수 싸이가 코리아 그랑프리의 완주를 알렸고, 결선이 끝난 오후 6시부터 경주장 내 상설공연장에서 대대적인 축하공연을 펼쳐 F1에 한류 효과를 완벽히 이끌었다.

특히 영암 F1에는 시리즈 랭킹 2위인 세바스찬 베텔(독일·레드불)이 1위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시즌 종합 1위에 올라 지구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회 때마다 관람객들의 불만을 산 교통과 숙박문제도 교통량 분산과 시설 확충에 따라 큰 혼잡을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이번 대회부터 TV 중계권료와 원천세를 비롯 230억 원 가량의 비용이 줄어드는 등 수지도 개선됐다.

하지만 F1이 지속 개최되고, 진정한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빚 잔치'라는 점에서 재원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대회 적자만 해도 500억 원에 이르고, 전남도가 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F1 운영예산 240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관람객 입장 수입과 마케팅, 기업체의 후원 등도 극히 저조하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F1을 방관해서는 안 되며,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 또한 정부 지원을 적극 이끌어 내야 한다. 조직위 역시 관람객 유인책과 스폰서, F1 관련 산업 유치 등 마케팅을 비롯해 경주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수익사업에 주력해야 한다. 지역의 저력을 발휘해 내년에도 성공 개최를 이끌어야 하지 않겠는가.

# 거액 혈세 빼돌린 공직 비리 근절대책 없나

공금을 다루는 회계·경리 담당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비리가 도를 넘어섰다. 수법이 대담할 뿐 아니라 액수도 커서 '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비아냥마저 나올 정도다.

완도군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완도군 공무원 A(37·여)씨는 최근 2년여간 공금 5억여 원을 빼돌린 의혹을 사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관리하면서 전산자료를 조작해 각종 사업계약 보증금, 직원 소득세 등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시 공무원 B(47)씨도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자신이 관리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보관하면서 일부를 가로채 감사원은 물론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 횡령액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아내의 사업자금 등으로 돈을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처럼 횡령의 수법과 규모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음에도 '생선가게에 고양이'를 키운 셈인 각 기관은 예방은 고사하고, 감시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 사건 모두 자체 감사가 아닌 감사원과 경찰청에 적발됐다는 점은 이의 방증인 셈이다.

사실 지자체 공직비리와 부패는 그동안 누차 지적돼 왔다. 그럴 때마다 해당 지자체는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자성을 해왔지만 비리가 끊이질 않는 걸 보면 그야말로 구두선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지방공직사회의 모럴해저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이런 공직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비리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게 주원인이다. 비리 공직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회계·허가 부서 등 담당자의 순환근무 의무화와 전결 규정 개선은 물론 내부통제와 외부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자성과 대책 마련, 그리고 진정한 공직사회 개혁이 시급하다.

## 법조칼럼

#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와의 소통

노재호

지난해 가을에 덴마크와 스웨덴의 법원을 방문해 제1심 형사재판을 방청한 적이 있었다. 직업 법관 이외에 일반 시민이 참심원으로 참여해 재판부를 구성하고, 법관과 참심원이 모두 법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재판에 참여했다. 법대(법정에서 재판부가 앉는 자리)도 높이 있지 않아서 재판이 마치 회의가 진행되는 듯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이 우선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필자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범죄의 피해자가 공판 내내 검사 옆에 앉아서 자유롭게 사실과 의견을 진술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비해 우리의 형사재판의 모습은 어떠한가.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이지만,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일 뿐 피해자는 유무죄를 밝히고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심리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더라도 피해자는 방청석에 앉아 그저 이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다. 검사가 즉각 반박을 해 주면 좋겠지만, 검사는 피해자만큼 사건의 실체를 알지는 못한다. 때로 참지 못한 피해자가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장으로서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는 한 그 발언을 제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미 당해 사건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권이 제한될 수 있고, 피해자가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까지 선서를 하고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진정서, 탄원서 등의 형식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재판부에 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형사소송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설령 재판부가 이를 읽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피해자는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호소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기도 하고,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혹시라도 피고인에게 무죄나 관대한 형벌이 내려지면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의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왜곡시키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 중 하나는 '소통'이다. 법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소송관계인 및 일반 국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공판중심주의가 실현돼 감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과의 소통은 활발해 졌지만,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와의 소통은 여전히 미흡하다. 현행 형사소송 구조에서 피해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피고인의 권리와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피해자와 소통을 하는 데 법적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범죄로 인해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마저 소외된 채 주변인에 머무른다면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요원한 것이다.

법원은 이제까지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피해자 중에는 단순한 보호의 대상 또는 심리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사람도 많다. 이들에게는 그것이 치유의 과정일 수도 있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는 헌법(제27조 제5항)의 이념을 깊이 새겨, 이제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이들과 소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단독 판사〉

## 기고

# 글로벌 인재 양성의 산실 '영어 체험캠프'

이호경

"대한민국은 영어 열풍을 넘어 영어 사대주의에 빠져 있다"고 혹자는 말한다. 이는 영어가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가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어의 가치는 요즘 '강남스타일'로 세계적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싸이의 케이스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유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당당하게 토크쇼를 즐기는 모습에서다. 노래 자체도 뛰어나지만 막힘없는 영어 실력 덕분에 세간의 관심과 싸이의 진가가 더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처럼 영어공부의 중요성은 굳이 필자가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실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문제는 영어실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있다. 특히 도서·오지 등이 많은 지역적 여건 때문에 열악한 교육환경의 대명사로 꼽히는 전남에서 말이다.

영어교육은 사교육이 활성화된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에서는 엄청난 비용과 수준 차이 때문에 공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남에서는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사교육 못지않은 공교육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영어체험캠프와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비용부담 없이 "대도시 영어학원을 능가하는 영어교육 방법은 없을까?"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에서 출발하였는데 벌써 5년째이다. 일반 학원에서는 흉내도 내기 어려운, 즉 한국에서 미국 실제생활에 버금가는 영어교육 환경과 시스템을 접목한 것이다.

시설확보를 위해 도내 대학교와 청소년 수련시설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고 교사는 전남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미주리주와 오레곤주, 애리조나주 주립대학교 출신 대학생 90여명을 선발하여 영어체험캠프 원어민 교사로 참여시켰다.

이들에게는 항공료와 현지 체재비만 지원하고 최근 한류열풍에 맞춰 전남 구석구석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적은 투자로 매년 수십 명에 달하는 미래 전남 홍보대사를 양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고 있다.

학생입장에서도 원어민 교사와 함께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합숙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활용해 보고 또 실생활에 적용되는 실용영어를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효과 때문에 영어체험캠프 인기는 해를 거듭 할수록 높아져 초·중 학생의 참여 경쟁률이 무려 6대1에 달한다. 학부모들도 비용부담 없이 자녀들이 대도시에서도 어려운 최적의 환경에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대 만족이다.

영어체험캠프가 이처럼 각광을 받는 이유가 또 있다. 그것은 캠프 참여자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겨울방학 기간 중에 미국 어학연수의 특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전남도와 교육교류협약을 체결한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주립대학교에서 영어수업과 함께 현지 또래들과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하고 현지 중산층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통해 생생한 현지 생활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독특한 아이디어로 출발한 전남의 영어체험캠프가 이제는 농어촌 영어교육의 큰 희망으로 둥지를 틀면서 전국 최고의 영어교육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며 날로 그 인기와 명성이 더해 가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농촌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 주기 위해 수혜자도 늘리고 프로그램도 보완하는 등 치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충주고 재학시절 한 달간의 미국연수를 계기로 외교관이 되겠다는 장래 꿈을 꾸게 되었고 현재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전남도와 도민 모두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에 지혜를 모으고 노력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제2의 반기문 사무총장이 우리 전남에서 배출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전남도 행정지원국장〉

## 無等鼓

### 고노 담화

"본건은 당시 군의 관여 하에서,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허다한 고통을 경험하고, 심신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우리는 이런 역사의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교훈으로서 직시해 가고 싶다. 같은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금 표명한다."

1993년 8월 4일 일본의 관방장관인 고노 요헤이가 발표한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에 관한 담화'의 일부다. 이 담화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전선에 끌려가 군인들의 성노예로 인권을 유린당한 아시아 여성들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 후 이들은 철저하게 버려졌다. 폭격으로 사망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살아남은 피해 여성들조차 가족 앞에 떳떳이 나서지 못한 채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랜 동안 민간업자의 소행이었다며 일본군의 관여를 전면 부정했다. 국제 사회와 피해 여성들이 진상규명과 정당한 배상 및 사죄를 촉구하고, 1992년 방위청 도서관에서 위안소 관련 자료가 공개되자 동원의 강제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형식적인 사과를 했을 뿐이다.

최근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며 고노 담화 폐기를 요구하는가 하면 영토와 역사문제를 놓고 한·중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과 군사력 강화를 주장하는 극우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고노 전 관방장관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부정할 경우 국가 신용 상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경기위기를 틈탄 일본의 우경화는 섬뜩한 파시즘의 부활을 떠올리게 하지만, 고노와 같은 양심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아 그나마 위안이 된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 가짜 파산 부추기는 브로커 기승…예방 시스템 필요

버스터미널, 전철역, 골목길 전신주에는 각종 전단지가 붙어있다. 그중에서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파산, 회생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100% 빚 탕감'이라는 큼지막한 글씨가 적혀 있는 게 눈에 띈다.

'빚을 대신 없애드립니다, 100% 면책 가능 무료 상담하세요.' 같은 문구는 빚을 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솔깃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브로커들이다.

법원은 가짜 파산자를 걸러내느라 심리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불법 브로커들은 이렇게 낚싯밥처럼 사회 곳곳에 전단지를 뿌려 놓고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파산신청자 입장에서는 브로커든 정상 법무사든지 간에 구분할 필요도 없다. 그저 정말 빚 탕감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파산제도를 잘 이용하면 손쉽게 빚을 털어낼 수 있다는 나쁜 인식도 강하게 퍼져있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 구제받는 사람은 1000명당 3명 정도라고 한다. 이 수치는 놀랍게도 OECD에서 2위라고 한다. 이처럼 파산 신청이 많은 까닭은 당연히 개인 파산을 부추기는 파산브로커들 덕분이라니 충격적이다. 파산브로커들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작해 채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파산신청을 대신 해주면서 수수료를 챙긴다.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는 원인을 우선 신청서류 작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법률지식이 상당해야 파산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파산신청 서류 작성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되면 이런 브로커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또한 법원에서 파산절차를 밟기 전 검증된 기관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무를 조정하는 단계를 거치는 외국 사례도 참조했으면 한다. ▲유남규·광주시 동구 계림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